

광주시·전남도의회 결산

열정·도전 엄지척...독립성 등 숙제

조례 70건·시정질문 36건 등 성과... '초선 74%' 우려 극복 조직개편안·소통문제 놓고 시와 갈등...쑥지 예산 등 도마 자치법 개정 불구 의회 '반쪽 독립'...숨가쁜 일정 등 숙제

"6년과도 같은 6개월이었습니다" "몸이 열 개라고...극한직업 중 하나라고 봐요" 지난 7월 개원 이후 첫 해를 맞이한 광주시의원들의 소회에서 고단하고 다난했던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이 고스란히 물어났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앞두고는 밤샘 공부가 일상 이 됐고, 주민 민원과 정당 활동, 조례 연구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희생'은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제9대 시의회는 7월 개원 후 연말까지 2차례 정례회, 3차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70건, 건의안 2건, 결의안 6건, 성명서 7건을 처리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각각 36건, 25건에 달했다. 특히, 시민 행복과 함께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의 경우 열정에 혁신이 더해지며 '초선 위주' 의회 구성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공무원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 조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는 의미 깊은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23명의 의원 중 17명(73.9%)이

초선이고,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40대 이하인 '젊은 의회'에 대한 개인 초기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됐고, 그만큼 기대감은 커졌다. 반면 일부 탈도 났다. 개인 초반 조직개편안 등을 둘러싼 소통 부재와 정보보좌 인력 충원을 놓고 집행부와 미묘한 갈등이 빚어졌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를 두고 공무원노조의 공개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쑥지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공개 실천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 7월 개원 직후 원 구성과 동시에 의회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현안에 대해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 소리가 나왔다. /김도기 기자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 정책연구 매진

전체 의원 61명, 민주당 57명 독점구조 11개 연구모임 만들어 현안 해결 앞장 6개월 동안 조례·건의안 등 240건 처리

제12대 전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의 서동욱 의장(순천4) 체제로 지난 7월 출범했다. 6·1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체 전남도의원 61명은 정당별로 민주당 57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당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25명(41%)이 도의회에 재입성했으며 선수별도 초선 32명, 재선 24명, 3선 4명, 4선 1명이다. 제12대 전남도의회는 7월 개원 후 12월말까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3회를 통해 조례안 106건, 건의안 36건, 동의안 25건, 결의안 8건, 승인안 7건, 예산안 6건, 규칙안 2건, 결

산안 2건, 기타 48건 등 240건을 처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첫 행정사무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물수 마약류 관리 허술과 전남도립대 방만 운영 문제, 의과대학 유치, 물 관리 대책 촉구, 금고 지정기관 대출금리 인하 요구 등 지역 현안에 천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12대 전남도의회는 의원들의 정책연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치분권,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역사관광, 농촌발전, 수산정책, 교육정책 등 현재까지 11개

연구모임을 만들어 정책연구·개발, 토론회, 간담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씩씩이 하는 등 일당독점으로 인한 정치적 다양성 부족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의장 후보로 출마한 진보당 오미류 의원(영광2)은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되지 우려스럽다"고 지지를 호소했으나 3표를 얻는 데 그쳤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올해는 12대 의회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정한 만큼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신발 끈을 더 동여 매겠다"며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뛰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광주 운전면허장 국비 44억 확보...건립사업 순풍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건축비 등 예산 44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정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90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210㎡ 규모로 운전면허시험장이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간 뒤 광주 시민들은 25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나주시험장까지 가서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 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광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예산 확보와 면허시험장 조기 건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립 광주청소년재활센터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산 살리고 국가사업 미중물" 광주시-국힘 협업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3조원에 국비를 확보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광주청소년재활센터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 광주청소년재활센터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역 국비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과 치료, 보호, 자립 등 지속적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광주시가 2018년부터 추진했지만 공모에서 탈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적극 나서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특히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장은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등을 대상으로 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MB사면 반대 기자회견하는 안민석 의원

안민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MB사면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야, 본회의 앞두고 대치...일몰법·민생 법안 충돌

화물차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제 등 일몰법 이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과 일몰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이어 여야 충돌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근로제)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12월 말 입몰되는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22일 합의한 바 있다.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가운데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법안은 각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26일 합의가 이

러면 안전운임제 기본 틀을 갖고 가지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고 2월이고 법안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도 초청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집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있다. /뉴스

김영록 지사 "지방의대 설립은 증원 문제 아닌 공공의료 실현"

시·도지사협의회서 내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 제안

김영록 지사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설립은 (의료 인력) 증원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3일 서울H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열린 총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지방시대 1대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을 비롯, '2023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제일 일정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한 이후 20년 만인 2015년이 돼서야 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3억 9000만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은 이번 예산 통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61년간 마음껏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에 광주 시민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고, 예결위 위원과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한 끝에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1995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처음으로 건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탄력...설계예산 통과 이전 기본설계비예산 3억9천만원 국회 의결

한 이후 20년 만인 2015년이 돼서야 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3억 9000만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은 이번 예산 통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61년간 마음껏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에 광주 시민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고, 예결위 위원과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한 끝에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1995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처음으로 건의

한 이후 20년 만인 2015년이 돼서야 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3억 9000만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은 이번 예산 통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61년간 마음껏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에 광주 시민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고, 예결위 위원과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한 끝에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1995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처음으로 건의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1위

전남도 10대 뉴스...도민 등 1281명 응답

전남도민과 공무원들은 올해 '전남도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전남 최대 뉴스로 꼽았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6일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2022 전남도 정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설문조사는 올 한해 언론에 보도된 도정뉴스 가운데 도민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30개 주요 뉴스에 대해 총 1281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1.8%(535명)가 '전남도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꼽아 올해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보전본부 유치는 전남의 갯벌 유산을 지키고, 향후 30년간 생산유발효과 927억원, 부가가치 효과 514억원, 고용유발효과 210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도민의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전남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477명(37.2%), '한국에너지공단 역사적 개교' 470명(36.7%), '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회복 첫발' 391명(30.5%), '전남도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시대 활짝' 368명(28.7%) 순이었다. /박종배 기자

